

반 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권익

2018 SUMMER
Vol. 57
ACRC QUARTERLY

cover story



망 원 경

억울함과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 날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손길이 닿지 않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망원경이 되어

더, 멀리 보겠습니다

목차

국민 권익



발행일 2018년 6월 25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박은정
편집인 한삼석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기획/디자인/제작 데이에치 031-247-5141



Cover story 망원경

국민이 중심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Special Theme

- 04 포커스 1
대한민국 청렴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 08 포커스 2
'국민생각함' 개통 2주년
- 10 ACRC 뉴스
- 12 세계속의 ACRC



청렴, 하다

- 14 시대인터뷰
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 18 글로벌 리포트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부패 청정국 지위를 얻었나
- 22 글로벌 리포트
국제반부패아카데미
- 24 브레이크 하트
서울미술고등학교 교사 정미현
- 28 정책공감
청렴 정책 국민모니터단 발대식



공감, 나누다

- 30 ACRC가 간다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군부대 집결부지 조성 갈등
현장조정회의
- 32 카드로 보는 국민권익
제도개선 · 고충민원
- 36 부서탐방
민간협력담당관실
- 40 기업신문고
"국기우선과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오감, 열다

- 42 청렴한 여행
소백산맥이 품은 청렴정신 '창백리'
- 48 건강보감
여름철의 불청객 냉방병
- 50 시크릿 팁
유튜브, 돈이 된다? 된다!
- 52 독자마당





왼쪽부터 김병섭 청렴사회 실현협의회 공동의장, 문재인 대통령,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한민국 청렴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4대 전략 50개 과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급 기관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협의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²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

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밖에 2030세대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 2 경제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대표 3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반부패 정책 과정에 참여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4대 전략

1 함께하는 청렴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내실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2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추악분자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 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재원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향만·해운 등 폐쇄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3 투명한 경영환경

사외이사, 준법감사인, 준법지원인 등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 실천하는 청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파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번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제도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국민의 귀한 목소리 잘 들어 정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개통 2주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정착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에 첫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개통 2주년을 맞이했다. '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국민 정책 참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경희대)

네이버와 국민생각함의 이유 있는 만남

●●●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행정기관에서 게시한 안건도 1,000여 건이 넘어가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국민 의견수렴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최대 유저를 보유한 민간포털과 협업해 '국민생각함x네이버 지식iN' 공동프로젝트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하고 국민관심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도 제공했다. 또 시민단체가 발굴한 행정·제도개선 우수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뒤 국민의 토론·설문조사·투표 등을 거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행정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기관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공무원 '터놓고 얘기하는' 정책참여 플랫폼
개통 2년 만에 이용자 참여 의견 수 4배가량 증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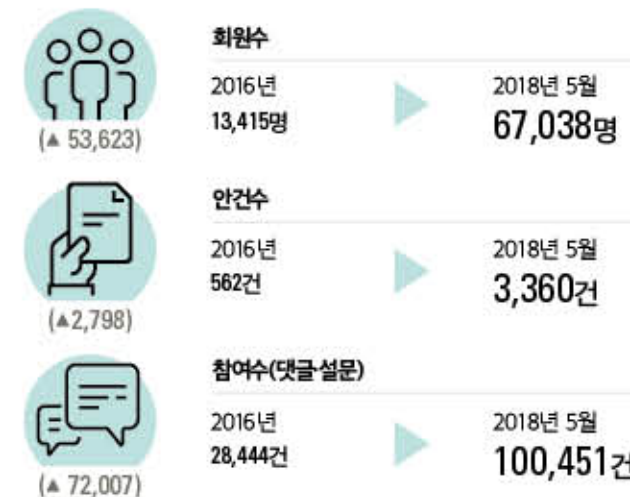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참여자간 토론·설문조사·찬반투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이용자 확보와 국민 관심 유도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와 공공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말 국민생각함 회원수는 6만7,038명, 토의안건은 3,360건, 댓글·설문참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개진은 10만 451건에 이르는 등 개통 첫 해인 2016년에 비해 모두 3~4배 증가했다.

국민생각함 주요 특징



주요 실적 변화



의견수렴 넘어 정책으로 실현, 국민 목소리 반영에 최선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생각함x네이버 지식iN' 공동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우수안건을 선정해 '생각키움상'을 수여하고 SNS 주요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20~30대 젊은층의 관심 안건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CRC HEADLINE NEWS



기업 권익 보호 위한 행정심판제도 권역별 기업설명회 호응

민간 기업의 행정심판 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2018년도 행정심판제도 권역별 기업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공단이 집중된 지역을 위주로 직접 찾아가 행정심판의 제도적 기능 및 권리 구제 실효성을 설명하고 신설 도입되는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3월 22일에는 1차로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행사를 진행했으며, 4월 4일에는 안산상공회의소를 찾아 해당지역 상의 회원사 및 관내 산단기관 임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행정심판 제도와 기업 재결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행정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행정쟁송보다는 새로 도입되는 조정제도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웅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행정 심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제도가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국민권익위는 4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스코트 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손 브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후지요시 유우코우 서울재팬클럽 회장, 김진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무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한외국상의 대상 간담회로서, 박은정 위원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이에 따른 권익위의 업무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주한 외국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기대감을 표명했고, 특히 최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주한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SUMMER 2018

청렴도 높은 싱가포르 공무원도 한국 반부패 정책 배운다

국가청렴도 순위가 높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세네갈,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과정이 운영되어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전세계 15개국 16명의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부패수익 환수, ISO 37001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 제6차 연수에는 18개국 31명이 지원하였으며 이들 중 정책전문 가능성이 높은 자원자를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총 16명을 선발하였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반부패 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을 통해 부패와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도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엔개발계획(UNDP) 코소보 부패영향평가 연수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코소보 국회의원 및 반부패청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서 국민권익위는 코소보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운영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코소보 반부패청법 개정안 및 부패영향평가 지표의 현지화 관련 심층적인 강의와 자문을 제공했다. 또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특히 코소보 측의 관심으로 권익위법의 주요 반부패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은 코소보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직접 실습을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며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경험이 코소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와 코소보 등에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을 제 개정할 때 반드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개발도상국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2016년에는 몽골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ACRC GLOBAL NEWS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청렴도 조사 제도 세계 이목 집중

2018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참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키르치네르 문화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회의에서 반부패 정책과 청렴도 조사를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주재로 열린 2018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청렴성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우선순위 선정 △각국 우수사례 및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공유 △향후 반부패 고위급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보다 중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사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제도도 소개되었다. 오장택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이론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 수단으로서 청렴도 측정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고, 제도 시행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 부패방지 사책평가와 청렴도 측정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을 각각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있음을 소개함

국제 부패문제 없애려면 국제사회 긴밀하게 협력해야

청렴작업반 회의와 청렴 포럼 및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전세계 30여 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청렴·반부패 정책의 설계와 이행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모범사례 공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국가기관 간 협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반부패·청렴 관련 정책 설계·시행 과정 공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2018년 청렴작업반 회의와 청렴 포럼 및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했다. 연 2회 개최되는 청렴작업반회의는 청렴·반부패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청렴포럼은 OECD 청렴주간에 열리는 고위급 행사로, 이번 회의에는 앙헬 구헤라 OECD 사무총장을 비롯,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총리 등 고위급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청렴네트워크는 2016년 12월에 프랑스 윤리담당기관이 주도하여 출범한 15개 국의 부패예방기관 회의체다.

'공정한 사회 건설'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뉘

'공정한 사회 건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렴포럼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었다. 국제화에 따른 국가별 부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패 문제에 그 뿌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범지구적

인부의 재분배를 위한 투명한 사회 시스템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부패취약부문 해소방안, 공공 인프라 분야 청렴성 향상, 조세기관과의 협력, 스포츠 분야 청렴성 등의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앤드류 스펀딩 리치몬드대 법학교수는 등 고위급 포럼에서 올림픽의 반부패 유산을 주제로, 올림픽과 반부패 개혁간의 관계를 발표하였고, 특히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부패 극복과정을 예시로 여러차례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 신고 제도 소개

청렴작업반 회의에서는 '공공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이행을 위한 돌킷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민권익위는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권고문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렴 네트워크 워크숍의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패 신고 제도를 소개하며 신고 절차 및 접수 경로, 신고 내용별 분류 방법,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알리기도 했다.

“

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청렴은 멀리 있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면 어떨까.
여기 청렴과 강직함을 마음속에 담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청렴 실천은 어떤 모습일까.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나부터 갑질하지 않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같은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도
함께해주길 희망합니다.

권유진
회사원 (29)



일상생활 속 미니갑질 조심

음식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니올지 모를 갑질항상 주의하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저 스스로 '나는 갑질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곤 합니다. 내가 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오늘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 택배 반품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갑질을 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갑질이 반드시 사라짐은 물론,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미니 갑질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하청업체 직원을 같은 목표를 이루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서비스업 종사자들과의 관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청렴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도 함께해주길 희망해요.

회사 내에 청렴에 대한
의견을 내고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한 명의 작은 의견이 모여
큰 목소리가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권지혜
회사원 (34)



작은 목소리 모여 큰 힘

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청렴·반부패 실천해요.

공기업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뉴스에서 기업의 갑질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기사를 볼 때면, 나부터 청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해서, 몰랐던 관련 법규나 협력업체와 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숙지합니다. 때로는 바빠서 교육에 참여하기 귀찮기도 하지만, 청렴하고 부패 없는 회사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기며 반드시 듣고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기업 내에 부정부패를 고발하거나 청렴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있더라고요. 혼자의 생각이라면 작은 의견일 뿐이지만,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30여 년 교단에 서며
늘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강직함과 청렴을 실천했습니다.
퇴직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곧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려 노력합니다.

주원식
전 교사 (71)



활기찬 우리 마을 근원도 청렴

청렴한 소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니
마을사람들도 믿고 더 잘 따라옵니다.

30여 년 교단에 서왔기에 저에게는 수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죠. 순간순간 드는 생각과 행동에 신중한 이유는 바로 제 제자들 때문입니다. 스승의 첫 짚 덕목은 바로 강직함과 청렴함이 아닐까요. 퇴직해 고향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고 곧은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인지, 고향 주민들 역시 저를 신뢰하고 잘 따라주어 매우 감사합니다. 좀 더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 싶어 제가 사는 무릉마을에 청렴정신을 이어갈 교육관 등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더불어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웃들이 믿고 적극 협조해주네요. 이런 믿음의 시작은 제 청렴한 소산이 아닐까 싶어요. 늘 잊지 않고 곧은 마음을 앞으로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부패 청정국 지위를 얻었나

NEW ZEALAND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패 청정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두 국가는 90점 안팎의 점수를 기록하며 선두를 다투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에서는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에서 89점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로 뽑혔고, 뒤이어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54점으로 51위에 그쳤다. 두 국가는 2013년 이래로 다른 나라에게 1, 2위를 내준 적이 없다. 두 국가 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어떻게 오랫동안 부패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까.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을 이끄는 고위임원들



뉴질랜드

제도 완비와 엄격한 법 집행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위를 기록한 뉴질랜드는 1995년 이래 CPI 지수가 4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국가 전체의 청렴 수준이 꾸준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뉴질랜드는 부패척결을 위한 폭넓은 제도를 갖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행하고 있다. 2개의 법률이 뇌물 공여와 수수를 처벌하고 있다. 범죄법(Crimes Act)은 공공부문을, 비밀위임법(Secret Commissions Act)은 민간부문을 규율한다. 또한 공공정보법, 국가부문법, 공공재정법, 재정책임성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한 목적 중 하나는 공무원과 장관들이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보다 더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반부패 특별기구도 운영 중이다. 1990년 「중대비리조사청법」(Serious Fraud Office Act 1990)에 따라 설립된 중대비리조사청은 뇌물과 부패, 주요 위임업무(변호사)와 관련한 사기, 다수 피해자 연루 투자 사기 등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삼는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정치적 통계나 지침을 받지 않으며, 수사 결정은 관리층 지시 없이 이뤄진다.

뉴질랜드는 범죄 경중이나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법을 적용한다. 2004년 7월에는 당시 헬렌 클라크 총리가 탄 관용차량이 지방 순시 중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사와 경호원들을 벌금형에 처했다. 2009년 11월에는 총리 직무 대행이 이발관으로 들어간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가 주차위반으로 벌금형을 물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뉴질랜드에서는 엄중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 청렴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범죄조사 기구 없이도 청렴국 지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

덴마크는 뉴질랜드의 중대범죄청과 같은 부패조사기구가 따로 없다. 대신 투명한 공공 행정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청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제도, 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정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은행이나 공공부문 웹사이트에 단 한번만 암호화된 로그인을 하면, 시민이나 기업들은 중앙 등록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citizen.dk'로 일원화된 포털을 통해 시민들은 공공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문서 박스"를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간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덴마크의 반부패 노력에는 언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감사원이나 의회 옴부즈만이 강도 높게 조사한다.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의 경우 의회에 의해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1년 현직 총리 남편의 탈세사건을 조사한 라스 아너슨 서부 대법원 판사가 "덴마크에서 정치인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건은 없다.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덴마크 정치는 깨끗하다. 사실 덴마크에서 반부패·청렴 관련 규제는 많지 않다. 청렴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률로 명문화해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론은 투명한 시스템 구축

반부패 지수 1, 2위에 빛나는 뉴질랜드와 덴마크의 청렴 원동력은 정부의 투명성이다. 뉴질랜드는 1982년 공공정보법을 제정해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국민이 쉽게 공적 부문의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공직 사회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수십 년 전 청렴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덴마크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정부공개시스템(Government openness system)을 통해 장관들의 월별 (1) 항응 (2) 출장 (3) 선물 (4) 공적 대표 (5) 익월 예상되는 공식 활동 5가지 부문에 대한 집행내역과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5대 원칙을 설명하며 "적폐청산·반부패 개혁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의 큰 범죄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나아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부패가 팽배한 나라에서는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부패 지수가 90점에 육박하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의 사회통합지수는 9점 만점에 7점에서 8점을 넘나들고 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적다는 뜻이다. 반면 반부패 지수가 30점인 멕시코의 사회통합지수는 3.5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정부패가 근절된다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공공부문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덴마크와 같은 부패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라스 아너슨 서부 대법원 판사가 "덴마크에서 정치인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건은 없다.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덴마크 정치는 깨끗하다.

국민들은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유착·부정부패 스캔들을 1년 반 전에 직접 목격하고 광장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냈다.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악습 및 관행과의 작별,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계 성장하느냐, 과거에 계속 머무르느냐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오는 10월 제18회 국제 반부패 콘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덴마크



지구촌 감싼 청렴 네트워크,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 반부패 협약(UNCAC)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기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는 세계 반부패를 향한 '지구촌 청렴 파트너십 형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반부패 위한 국제 전문 연구·교육기관

IACA

지난 2010년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개관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는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업무는 세미나와 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부패방지와 관련한 동료 간(peer-to-peer) 교육 및 훈련,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청렴한 지구촌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¹ 민간부문반부패 석사과정(IMACC, Master's i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Collective Action)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² 등이 그것이다.

한국 포함 전세계 직원

함께 근무

한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조직구성은 마틴 크로이트너 Martin Kreutner 학장(2012~현재)을 중심으로 당사국총회(Assembly of Parties), 집행이사회(Board of Governors, 11명), 국제수석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15명 이내),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15명 이내),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직원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40여 명의 소속직원과, 이와 별도로 한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정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 부여
2 반부패 실무진을 위하여 매년 7월 개최되는 2주 단기과정

IACA 지역여름아카데미 신청하세요!

이번에 열리는 IACA 지역여름아카데미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내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자의 능력을 확장하고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8일 집중 코스다. 반부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전략 방안을 제공한다.

일시 9.6~9.16(8일)

※원서접수 7.27까지

장소 중국 베이징

내용 경제학, 법집행·예방, 윤리학, 청렴성과 준법,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지역 현안·사례 연구

대상국 브루나이, 다름살렘, 캄보디아,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지원요건

▶ 전문경력 5년 이상의 반부패/컴플라이언스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공공, 민간부문, 국제기구, NGO, 언론분야 종사자 및 관련부문 연구가

▶ 어학능력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 검정 시험 성적
- TOEFL: PBT 574점, CBT 210점, IBT 89점 이상
- Cambridge First Certificate in English(FCE)
- Academic IELTS Test: overall score 6.0 이
※ 2년 이내의 성적표 인증서만 인정
- 영어권 국가에서의 1년 이상의 대학교 정규 교육 또는 전문경력

비용 강의료(tuition fee) 480 유로

※지멘스 청렴이니셔티브의 공동 후원
문의 summeracademyESEA@iaca.int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
(48)

Jeong mi

사학비리의 어둠을 지나 아름다움을 꽃피울 봄날을 기다려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꿈의 절실함을 잘 아는 교사'이자 '천안나처럼 다정하고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미현 교사를 이렇게 기억한다.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했던 그녀는 회계비리를 제보해 해임되었다가 올해 3월 복직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고 있다.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비팀목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정 교사에게 아침마다 화구박스를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자리한 동네에서 오고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기에 그녀는 모교나 다름없는 애정을 갖게 되었다.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려워 미술을 전공하진 못했지만, 이루지 못한 어린 시절의 꿈은 2001년 서울미술고 국어교사로 입사하게 된 이유가 됐어요.”

또다른 계기는 안정적인 일터가 되어 줄 것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해 동덕여대와 인천가톨릭대학교 등에서 독서교육론과 아동문학론 등을 강의하고,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할 바 있는 그녀는 미련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선생님이 되었다. 미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절실함을 알기에 정 교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정 교사는 아이들이 입학해 원하는 전공수업을 마음껏 듣고 꿈을 이룰 때까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교내 회계 비리를 알게 되면서 그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도한 수업료 정수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서울미술고는 대학의 수시모집처럼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전기 선발하는 ‘특목고’, ‘예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 교사에게 따르면 이 학교는 처음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자율학교로 지정되었고, 수업료 자율징수권이 없는 사립 일반고임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반고의 3.25배의 수업료와 63배의 입학금을 받아왔다. 정 교사는 “입학금 90만 원에 수업료는 연간 472만 원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보다도 비싸다”고 말했다. 2015~2016년 수업료 업무를 맡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정 교사는 그때부터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사립학교법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돈이 없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단지 미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며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다 등록금 문제와 회계비리를 목인할 수 없었던 정 교사는 결국 이 사실을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hyeon

죽벌승계를 위한 마구잡이식 교사퇴출

학교에서 하나 둘 떠나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부터 1년 여 동안 5명의 정교사를 포함하여 17명의 강사, 기간제 교사가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떠나야 했다. “2015년 임기가 남아 있던 전 교감선생님이 강제로 강등되면서 이사장과 교장의 딸이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2018년 3월 학교장의 딸을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나이드는 교사를 내보내는 과정이었죠. 그 잔인한 과정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교사가 27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2016년에만 20~30초반의 정교사를 11명이나 채용한 후 살생부를 만들어 6개월 동안 기존 정교사들을 한 명씩 해임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 연장을 하거나 일직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강제 퇴직시킨 것이다. 그 중에는 수업 당일 아침 해고통지를 받고 울며 떠나는 교사도 있었다. 2016년부터 과다등록금 문제와 회계비리 제보를 준비하던 정 교사도 해직 대상이 되었다. 결국 학교 측은 2017년 3월 학생성추행과 아동학대를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고발했다. 가정과 학업 문제로 힘들어하던 학생을 상담하던 중 안타까움에 안아주었던 것과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행동이 성추행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데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 드러나 정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성추행으로 낙인찍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학교 측의 행태에 정 교사는 씁쓸함을 느꼈다.



교권탄압과 '5대 비리' 척결을 위한 제보

처음 강제로 직위해제를 당한 뒤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정 교사에게 힘을 보태준 것은 먼저 해직된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죽벌정영은 물론 채용, 인사, 입시, 급식, 학사 행정 개입 등 정 교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각 분야의 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다. 정 교사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밝혀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8,000만 원을 회수 처분했다. 5대 비리 백화점의 중심에 서 있던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을, 이사장과 이사는 임원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보 이후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 명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책정된 등록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탐욕을 채워왔던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와 학생들이 2, 3차 원고단을 희망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순수하게 미술을 공부하고 예술가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버텨낼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위협과 보복

지난해 7월 서울미술고의 회계비리 제보로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정 교사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호루라기재단이 인권과 공익을 위해 활동한 이에게 주는 ‘호루라기상’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도 두 차례나 직위해제 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파면을 당했다. 정 교사와 함께 제보한 다른 동료들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하는 지속적인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보 이후 1인 시위를 하다가 학교 측 인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학교를 방문했다가 끌려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이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가 많지만 제보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로 사학비리 뿌리뽑아야

학교가 20여 년 동안 온갖 비리를 저질러오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 학비가 비싼 것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운동장에서 실기 수업을 하는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소묘와 전공 수업 등에 사용되는 석고상과 이젤은 여기저기 파손돼 있고 높이 조절도 잘 되지 않는 데도 교체하지 않았다. 정 교사는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교사가 자주 바뀌며, 실기

수업 공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고 말한다.

“1999년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던 교사는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리가 낱알이 밝혀졌다면, 학비가 없어 떠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자 안정된 일터로 거듭나길

정 교사는 올해 3월 14일 교육부 소청심사 위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사는 언젠가는 서울미술고가 졸업생에게는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고, 학부모에게는 저렴한 학비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재학생에게는 풍족한 기반시설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안정된 일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학비가 무료임에도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전통예술의 메카로 성장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서울미술고등학교와 같은 시기인 1999년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2002년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죠. 비슷한 궤적을 지닌 학교가 사학비리의 어둠을 벗어나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미술고등학교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버텨낼 것입니다.

청렴·반부패 정책, 국민이 제안하고 모니터링 한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발대
“관련 정책 제안·시행 점검 역할 할 것”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꾸려졌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50명은 오는 10월까지 각종 간담회와 정책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



4월 28일 문화공간 숲도에서 열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에서 박은정 위원장(두번째 줄 가운데), 모니터단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0여 명 지원, 다양성·이해도 고려 50명 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숲도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열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0명의 모니터단원들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곳에 모였다”며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점검과 다양한 제안 등 활발한 의견 공유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05년 40위에서 2011년 43위,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방향과 세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지난 2월 반부패·청렴 정책에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모집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연령, 성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을 선발했다.

정책 제안·참여·모니터링의 2개 분야 활동

모니터단의 활동은 크게 정책 제안·참여와 정책 모니터링이다.

정책 제안 및 참여

<온라인> -모니터단은 활동기간 중 1인당 2건의 정책제안을 하고, 이 중 우수제안은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속의토론 진행
-국민생각함 내 ‘반부패·청렴정책’ 코너에 올라오는 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 공모 등에 적극 참여

<오프라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모니터단의 활동사항 중간점검 및 공유, 반부패 정책 설명, 청렴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실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법령 재·개정 등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에 참여(수시)

정책 모니터링

-모니터단을 전체 10여개 팀으로 편성하여 팀별로 모니터링 대상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배정
-팀별로 배정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 관련 언론보도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개선보완점, 체감도 등 모니터링 실시(수시)

MINI INTERVIEW

최명숙 프리랜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며, 아이들 인성교육과 더불어 자연스레 청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직접 실천하고 싶어 청렴 정책 국민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며 청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제 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재윤 교사



“올해 막 임용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육자의 중요한 덕목중 하나인 청렴, 반부패를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며, 모니터단 지원 이전에도 권익위 국민참여단과 교육부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제 자리에서 작게나마 청렴을 실천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모니터단 역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우리 사회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현재 대학생



“점차 배려심이 없어지는 사회를 보며 제가 서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기회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갑을관계 척결이나 전관예우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정책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공부해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꼭 반영하길 희망합니다.”



박은정 위원장(가운데)과 이정기 육군제7군단장(오른쪽) 및 관계자가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일대 탱크 집결부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주민은 안전사고 위험 해소, 군부대는 부지매입 예산 절감 양보와 배려가 맺은 아름다운 결말

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군부대 집결부지 조성 갈등 현장조정회의

지역주민과 군부대 간 갈등을 빚어왔던 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일대의 '탱크 집결장' 조성사업이 민·관·군의 양보와 협력으로 순조롭게 추진된다. 주민 안전과 유적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4월 11일 박은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를 들여다본다.



“이번 조정결과는
민·관·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적지 보호, 국토방위라는
3가지 성과를 한번에 이룬
매우 바람직한 상생협력 사례”

안전사고 불안감... 군부대 집결부지 조성 반대

7군단 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7억 원을 들여 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일대 4만9,500㎡에 달하는 기계화 부대 집결부지의 매입을 추진해 왔다.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 훈련 시 이 부지에 탱크와 자주포 등을 임시 집결시켜 정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을 위해 양평군에서 원주시 부론면 마을을 관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10년 전 탱크 이동 중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또 집결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계화 부대 이동은 산업물류 흐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원주시는 집결장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흥원창지, 거둔사지, 법천사지 등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군부대의 집결장 조성을 강하게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고 중재안 마련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군부대, 원주시, 주민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4월 11일 강원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서 육군 제7군단장, 원주시장, 부론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제7군단은 기계화 부대 집결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대신 원주시가 관리하는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훈련시 집결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이 부지가 국유지인 점을 감안해 집결장 내에 세물장, 병사 화장실 등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탱크와 자주포 등 이동시 기존처럼 부론면 마을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10km 떨어진 섬강 하천길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7군단은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원주시는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 예산 27억 절감·주민 불안감 해소, 유적지 보호까지

한편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집결장 부지 매입 예산 27억 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지역인 흥원창지, 거둔사지, 법천사지 등 문화 유적지도 보호하게 됐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과는 민·관·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중지를 모아 이루어낸 결과”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적지 보호, 국토방위라는 3가지 성과를 한 번에 이룬 매우 바람직한 상생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생계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통장 압류 꼭 해야 하나요?

제도개선



통장압류 고충민원

2013년 57건 → 2015년 103건

현재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개인별잔액 150만 원 미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방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계곤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장압류 해제 요구 고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

	건강보험 관련 고충민원		통장압류 해제 요구	
	처리건	구성비	처리건	구성비
2013년	458	(100.0)	57	(12.4)
2014년	331	(100.0)	74	(22.4)
2015년	351	(100.0)	103	(29.3)
3년 평균	366	(100.0)	78	(20.5)

현 제도는

통장압류(채납처분) 근거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료를 통합징수 하면서 보험료 채납에 따른 압류는 「국세징수법」의 채납처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보험료 등의 채납처분이란?

납부고지 보험료 미납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 규정에 의거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

4대 보험료 채납에 따른 통장압류(채납처분) 절차

① 보험료고지 → ② 보험료독촉 → ③ 납부독려 → ④ 채납처분 승인 → ⑤ 납부최고 → ⑥ 압류예고통지 → ⑦ 압류 → ⑧ 압류의 통지 → ⑨ 압류의 추심/해제

압류란?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채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의미



4대 보험료 채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통장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되어 '생계압박'을 받고 있으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협의 과정을 들여다봤다.

압류금지 소액금액에 대해 확인 안하거나, 구제정보 안내 전혀 없어



사례 1

신청인은 사업실패 후 수입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공단이 가족의 생계가 달린 통장을 압류하여 현재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해 달라.

(2015. 8. 은○○)



사례 2

건강보험료 채납으로 공단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고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 채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어 유일한 계좌인 우체국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시중은행 10개의 잔액증명서를 모두 해오거나 미납금액의 50%를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 다른 은행은 모두 추심해도 좋으니 우체국 계좌 만이라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

(2015. 9. 이○○)

개선방안

국민권익위,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 절차 마련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예금통장(개인별 150만 원 미만)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예금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 마련

- 채납자에게 '예금채권 등 압류(예정) 진행 통보'시 압류금지 예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압류금지 여부를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채납자가 압류금지 통장에 해당한다고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금융거래정보 확인동의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압류여부 결정

생계형 채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예금통장(예: 일용근로자의 봉급수령용 통장 등)의 압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장압류 유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압류통장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공단에서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일정액(채납액의 50%미만) 납부 후 분할납부' 등 압류통장 해제 시 적용하고 있는 임의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문의 국민콜 110

군 복무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망자의 순직 인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고충민원

CASE
#2

민원 신청인의 아들 군 복무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

민원 신청인의 아들 고(故) 허 모씨는 1983년 9월 28일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대하여 육군 제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복무 중 1년 후인 1984년 4월 2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폐유류고 뒤에서 M16 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1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재판부 엇갈린 판결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군 수사기관은 허 모씨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신청인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타살', 2심 재판부는 '자살', 대법원은 '자·타살'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등 혼란을 겪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1기: 2000. 10. 17. ~ 2002. 9. 16, 2기: 2003. 7. ~ 2004. 6. 30.)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의문사위는 2004년 6월 28일 허 모씨의 사망원인을 제1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와 같은 타살로 발표하면서, 허 모씨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하였다.



3

관련 판례는

- 헌법재판소는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중략) 그 임무의 특성상 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희생에 대하여 정의 또는 국민적 연대의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행해질 것이 요청되며(후략).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37 결정 참조

- 대법원은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그러므로 군 의무복무자로서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소속대(GOP 경계 근무 부대)에서 복무하며 사망한 허 모씨에 대해, 공무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순직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사망 원인 불분명한 사건도 처리 가능한 순직 처리 규정 만들어야

허 모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 군 수사기관의 과실 등으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순직 처리 규정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과거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기인한 사망 원인 불분명자들에 대하여 전향적인 순직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문의 국민콜 110

6





왼쪽부터 양용석 사무관, 강선아 과장, 박세희 사무관, 최현민 사무관, 최승남 서기관, 이종성 주무관, 한정운 사무관

국민과 정부 사이 청렴을 향한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반부패를 실천하는 일은 더 이상 정부만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이 국민과 정부의 매개체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조차 찾아든 맑은 5월의 어느 봄날,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봄벌겋이 따스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 어느 부서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포부를 밝히는 민간협력담당관실의 이야기를 <국민권익> 여름호에 담았다.

민간협력담당관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민·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국민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 일곱 명의 부서원이 지난 2월 꾸려졌다. 3월 부임한 강선아 과장까지 합세해 ‘완성’ 됐다. 강 과장은 “2018년은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기업 등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민간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의 말처럼 민간협력담당관실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렴사 회민관협의회」 구축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 발족 3월6일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구성 공동의장 : 김병섭 서울대 교수(서울대 평의위원회 의장)
경제계·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 30인
▲재계4명(대한상의·중기중앙회·경총·여성경제인협회) ▲직능부
문 5명(대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홍사단 투명
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방송협회) ▲공공부문 3명(국민권
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익부문 3명(내부
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 활동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세칙' 심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안' 논의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의장 : 대통령)에 보고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추후 이행상황 등 모니터링·평가
공익신고자 명예의 전당사업 등 다양한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 전개
기업 등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 추진 지원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시행에도 국가청렴도는 퇴
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주도가 아닌 사회 각 부문과 시민이 참여
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을 위한 민간분야 반부패 권익
증진 프로그램 발굴에도 앞장선다.

※ 국가청렴도(CPI) 순위 : (2005년) 40위, (2011년) 43위, (2017년) 51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 신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권익 보호 증진, 반부패 민·관 협력 활
성화 등
- 선정기준 사업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1,000만 원~2,000만 원 규모로 지원

기업윤리경영 지원



- 방문교육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윤리
교육과정 방문교육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배포 국내외 기업의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
한 '기업윤리 브리프스(Business Ethics Briefs)'
오프라인·웹진 형태 게시 배포

민관협력담당관실은 기업윤리경영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강 과
장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윤리경영'이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접점
이 큰 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경영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또 경제단체 등과 협업
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방안을 세워 수립·추진할 계획
이다.

뛰어난 일급 명의 용병 모은 '드림팀'

강 과장은 여섯 명의 부서원들을 두고 '뛰어난 용병들을 모은 드림팀
느낌'이라며 웃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과는 지금까지 해온 업무에서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행정·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점차 '민관 협치'를 원하기 때
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관협력, 시민단체 지원 등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과장은 또 "특히 민관 협력을 담당하는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 국
민권익위 내에서 개념과 특성이 구분되는 부서 중 한 곳"이라며 "그래
서인지 자신 고유의 업무를 해 나가는 부서원들의 적극성과 도전정신
이 남다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연령대가 분포되어 균형과 시너지가 고루
발산된다고 말하는 민관협력담당관실 부서원들, 청렴한 사회를 향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앙용석 사무관



"우리 부서는 업무 프로세스와 수행 마인드가 일반 기관과는 좀 달라요.
민간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기에 좀 더 자유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많은 편이다 보니 특히 서로 간
의 신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2002년 입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업과 사회단체들에 더 많은
자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희 사무관



"총인원이 일급 명인 우리는 다른 부서에 비해 적은 멤버여서 서로
더욱 돈독하고 가까운 편이에요. 기업윤리, 민간부문 관리 지원을
맡고 있어 좀 더 예민하면서도 부서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은
데,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고 협조해줘 고마운 마음입니다.
'직업병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는 민관협력담
담당관실 모든 직원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성 주무관



"비로 오늘이 국민권익위에 입사한 지 일 년째 되는 날이자 임명장을
받은 날입니다. 정신없는 1년이었지만, 그만큼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 한 해였습니다.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선배들에게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익혔으며, 더불어 책임감과 열정 또한 보고 듣고 본받
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겠
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국민권익위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우선과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모든 기업민원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접근

충북 진천군 ‘초평은암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원 해결 사례

충청북도 진천군은 기업도시다. 수도권과의 가까운 거리, 중부고속도로 등 원활한 교통망, 저렴한 공장부지 등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진천군에는, 2018년 3월 기준 5개의 산업단지와 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1,300여개의 기업이 등자를 틀고 있다.

이러한 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지난 2009년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는 등 2019년 6월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임야였던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 부수적으로 진행됐던 토석채취 면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설 새 없이 공장 터를 닦던 중장비들이 모두 멈춰서고 20만평에 달하는 현장엔 정적뿐이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진천군 산업구조 변화 선도, 지역경제기반 육성 및 내륙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조성에 매진하던 충청북도



와 진천군, 시행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에는 2018년 4월 기준 총 12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였고, 첨단IT기업 등 사실상 입주가 확정된 중대형 제조업체 8개가 자리를 잡는 2019년 하반기에는 좋은 일자리 3,500개가 새롭게 창출될 예정이었다.

“3500 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산업단지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대로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는데, 그럴 경우 시행사 부도, 기업 입주의 무기한 지연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20만평의 부지가 산을 걷어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행사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진천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현장조사(2회), 관계자 면담(수시) 등을 통해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 민원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13.12월)에 주목했다. 현재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이 민원 현장의 경우 개정 전 유권해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단지 내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하다면 산업단지
변경협의 시 포함해서 실시하면 된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라”

시행사와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변경협의 시 토석채취 면적과 사토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고, 토석판에 부가수익은 분양원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절차 누락의 고의성이 없는 점, 국비와 지방비 137억 원을 투입한 진입로 완공이 임박했고 입주기업이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산단조성이 요구되는 점, 누락된 토석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공사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해 환경저감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조정안을 도출해냈고 시행사와 충청북도, 진천군,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은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였다.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4월 4일 현장조정회의에서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기관과 공직자들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오감, 열다
청렴한 여행

글 노경희 | 사진 주효상 | 영상 최대규

www.aarc.go.kr

소백산맥이
품은

청렴정신

清白吏



경북 문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에 백성을 먼저 여기는 조선시대 이상적인 관료상, '청백리'. <국민권약>이 불호 충청도에 이어 울 여를을
앞두고 경상도를 돌아봤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자랑이자 본보기로 함께하고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대표 청백리 3인의 발자취를 따랐다.

강직한 성품과 따뜻한 감성
<춘향전> 이몽룡의 실존인물, 계서 성이성

경 북 봉 화

조선시대 대표 로맨티스트, 이몽룡의 모티브

양반의 자제와 기생의 딸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춘향전>의 남주인공 이몽룡을 경북 봉화에서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 로맨티스트 이몽룡의 실제 모델이자 내외 관직을 두루 거친 청백리였던 계서 성이성의 청렴한 성품과 따뜻한 감성은 그의 생가인 봉화 계서당종택에 그대로 남아있다.

남원부사 성안의의 아들과 퇴기 월매의 외동딸 성춘향의 사랑이야기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 이몽룡이 실제 인물 성이성이라는 것은 지난 1999년 연세대 설성경 교수의 '이몽룡의 러브스토리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남원에서 생활하다 우연히 남원 기생 춘향을 만나게 된 성이성 그러나 춘향과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바로 소설 <춘향전>의 모티브가 되었다. 소설에선 실명 거론이 부담스러워 주인공 성을 이 씨로 바꿨고, 대신 춘향을 '성씨로 정했다고 전해 내려온다.



13대 추은 성기호 씨네외



계서성이성의묘

술향 은은한 동산 기슭, 아담한 민가 옛모습 담은 종택

소나무 숲이 우거진 동산 기슭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집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계서 성이성(1595~1664)이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지었다고 전한다.

계서당종택의 사랑채는 후에 넓히거나 다시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경사진 산록에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우뚝 솟아 보이는데 왼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사당을 배치하고 주위에 와편담을 설치하였다. 정면 7칸, 측면 6칸의 'ㄱ'자형이며 사랑채와 중문간(中門間)으로 이어졌다. 대문간을 들어서면 비교적 넓은 사랑마당이 있고 맞은편 높은 곳 서쪽에 중문간채가 있다. 동쪽에는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고, 사랑채 서쪽의 중문으로 들어서면 안채가 있다. 또한 동북쪽에 따로 담장을 둘러 사당을 배치하였다. 이곳의 안채와 사랑채는 다른 곳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안채는 도장방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사랑방은 대부분 출입으로 구성하는데 이 집은 겹집으로 만들어 안채의 날개집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소 경북 봉화군 물아면 계서당길 34-1

전화 054-673-8670(계서당)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청렴·근검한 삶

계서 성이성(1595~1664)은 "당대에 뛰어난 경세가이자 어진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였다. 특히 호남지역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적발해 척결하였으며, 강계부사 재직시에는 어진 정사를 펼쳐 칭송받았다. 성이성의 사후 조정에서는 그 공적과 청렴함을 높이 평가해 청백리 녹을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이성의 청렴한 행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1635(인조13)년 부교리 배명 등이 역론으로 죽고, 그 아들이 연좌되어 죽게 되어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성이성이 상소하고 간곡히 주청하여 그 아들과 연루된 자들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고도 이를 감추어 아무도 모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성이성은 평생 근검하게 살아왔으며 특히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일생을 강직하며 권세에 동조하지 않고 정언·헌납·사간 등을 역임하는 동안 직언으로 일관했다. 관직에선 절용(節用), 애민(愛民), 청렴을 첫째로 삼았다. 여인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더불어 강직한 성품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성이성은 1695년(숙종 21) 청백리로 녹선됐다.

진실한 마음과 더불어 청렴·근검한 삶,
계서(溪西) 성이성(1595~1664)

계서 성이성(1595~1664)은 당대에 뛰어난 경세가이자 어진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였다. 특히 호남지역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적발해 척결하여 칭송받았다고 기록된다. 1635(인조13)년 부교리 배명 등이 역론으로 죽고, 그 아들이 연좌되어 죽게 되어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성이성이 상소하고 간곡히 주청하여 그 아들과 연루된 자들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고도 이를 감추어 아무도 모르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관직에선 절용(節用), 애민(愛民), 청렴을 첫째로 삼았다. 여인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더불어 강직한 성품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성이성은 1695년(숙종 21) 청백리로 녹선됐다.



계서당 종택 전경

진정한 선비정신, 청렴한 권리의 상징
신재(愼齋) 주세붕 (1495 ~ 1554)

주세붕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고 효자로 유명했다. 일곱 살 때 그의 어머니가 병이 나오 랫동안 빗질을 못 해 이가 골자, 주세붕은 자신 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후 같은 베개를 베어 이 가 울도록 한 일은 지금까지 후세에 전해 내려 온다. 중종 17년, 28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계속 도리를 지키며 살았으며, 특히 풍기군수를 지낼 때 인삼 재배를 권장해 오늘날까지도 풍기가 인 삼으로 유명한 땅으로 남게 만들었다. 유학자로 도 이름이 높아 안유의 고향인 풍기에 사당과 함 께 백운동 서원을 지었다. 이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왕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 라는 액자를 내리기도 했다.



경남 함안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산서원

주세붕 선생의 선비정신 잇는 후학 양성, 무산서원

경 남 함 안

무산서원은 1591년(선조 24)에 신재(愼齋) 주세붕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생가 자리에 건립한 동 립(桐林)서원 터였다. 임진왜란 때에 불탄 것을 후손들이 다시 지었으며, 1676년(숙종 2)에 '덕연(德淵)'이란 이름을 하사 받았다. 이후 1868년(고종 5)에 공포된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서원이 헐리 자, 선생의 영정을 종가사당으로 옮겼다. 그러다 1919년에 사당 옆에 전각을 세워 선생의 영정을 모 션고 서당을 지어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곧 무산서당이다.

건물은 서당을 중심으로 그 뒤편에 영정을 봉안한 광풍각(光風閣), 서적과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 등이 능선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건물 배치법은 앞쪽에 교육 영역을 두고, 뒤 쪽에 제례 영역을 두는 일반적인 서원 배치법과는 차이가 있다. 무산서당의 지붕은 옆모습이 여덟 팔 (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중앙 2칸의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 각각 2칸과 1칸의 방을 꾸며 전 형적인 서당의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소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길 75
문의 055-580-2321(함안군 문화관광과)



정려각



옥산서원

조지서의 강직함, 그를 닮은 부인 정씨의 정절

경 남 하 동

하동 대곡리 오천 정씨 정려각(旌閭閣)

숙종 때 청백리로 복선된 조지서는 갑자사화에 연루되며 연산군에 의해 참형 당한다. 이후 그 시체를 내다 버리게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정씨가 목 놓아 울며 강물로 뛰어들어 떠나려가는 시체 조각들을 건져올려 치마에 거두어 담았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의 숙부인 진주 목사 이우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 조선 중종 때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인 정문(旌門)을 하사받았다. 중종 2년(1507년) 옥종면 정수리 옥산서원 근처 정수역 앞에 처음 세워졌다가 조지서 선생의 후손이 낳은 것을 고치고 1760년 9대손 조덕상이 조지서 선생 묘와 가까운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로의 한식 기와 목조 건축물이다. 판액(板額)에는 남편 조지서의 억울한 죽음으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개와 의리를 잃지 않은 오천 정씨를 기리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현재 보안상의 문제로 비각 안은 비어있다.

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산152

옥산서원(玉山書院)

정려각 근처엔 조선시대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몽주(鄭夢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조지서의 부인 정씨가 바로 정몽주의 증손인 생원 정윤관(鄭允寬)이 자녀다. 경내건물로는 3칸의 묘우(廟宇), 1칸의 영각(影閣), 10칸의 강당, 각 3칸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3칸의 장판각(藏板閣),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 7칸의 주사(廚舍) 등이 있다. 묘우에는 정몽주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영각에는 정몽주의 영정이 소장되어 있다. 강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강론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고자(庫子)가 사용하고 있다.

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산서원길 61-7

연산군에 쓴소리 마디않던 대목성품
지족(知足) 조지서 (1454 ~ 1504)

지족 조지서는 1474년(성종 5)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으며, 이어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다. 1479년(성종 10) 다시 증시(重試)에 1등으로 합격하여 형조 정랑을 제수 받고 홍문관 교리와 응교를 역임하였다. 1481년 성종대를 통하여 교리·형조·정랑·지평·응교, 세자시강원·필산·보덕을 역임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연(經筵)의 시독관(侍讀官)·과시강관(侍講官)을 항상 겸임하였다. 연산군의 스승으로 강직한 성품과 엄격한 지도력으로 미움을 사기도 한 조지서는, 연산군이 즉위하자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사직하여 고향인 옥종 동곡으로 돌아온다. 1506년(중종 1)관작이 회복되고 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에 추증되면서 신원(伸冤)되었다. 경상남도 진양의 신당서원(新堂書院)에 제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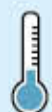


경남 하동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의 불청객 냉방병

찜통더위 싫다고 에어컨만 찾으면 으슬으슬 지끈지끈 냉방병도 같이 와요

시린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오니 싫더니 어느새 불발더위가 기승이다. 무더위를 피해 냉방기기 앞에 모여드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찾아온 '냉방병'. 두통부터 피로감, 감기증세까지 몰고 오는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 미리 파악하고 예방해 이겨내 보자.



냉방병이란

냉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가벼운 감기 증세와 비슷한 질환. 냉방이 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심하여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왜 걸릴까

과도한 실내외 기온차가 심하면 냉방병이 발생한다. 여름의 무더운 외부 기온에 비해서 실내 온도를 에어컨으로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우리 몸이 과도한 실내외 기온 차이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다.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확장되었던 말초 혈관이 실내의 냉방이 잘 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급격히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에어컨을 계속 틀면 실내의 수분이 응결되어 습도가 30~40%까지도 낮아지므로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이 건조되어 인후염이나 감기와 같은 증세를 일으키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증상 보일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게 시작한다.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데 이때 관리하지 않으면 잘 낫지 않는다.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흔하다. 손발이 붓거나 어깨와 팔 다리가 무겁고, 허리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며 심할 때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소화 불량과 하복부 불편감이 있고,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냉방병에 취약하여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냉방병의 영향이 더 심할 수 있다.



예방하려면

- ① 실내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한다.
- ② 에어컨에 장기간 있어야 된다면 얇은 옷을 덧입어 찬 기운에 노출을 피한다.
- ③ 2~3시간 간격으로 실내환기를 시켜준다. 폐쇄된 실내에서 에어컨을 오래 작동하면 산소가 부족해 두통을 유발한다.
- ④ 찬음료를 피한다. 더운 날씨 같증이 심하다며 자주 마시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다면 특히 따뜻한 물이나 차로 대신한다.
- ⑤ 집에서 하는 반신욕, 족욕 등 온찜질도 도움이 된다. 이때의 온도는 42도 이하로 맞춰,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한다.



유튜브,
돈이 된다?

된다!

유튜브(YouTube)
수익창출

최근 구글은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약간의 비용으로 광고 없는 비디오와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백그라운드 사용할 수 있다.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이미 18억 명에 달하는데, 새로운 이용자를 더 다양하게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클릭수에 따라 돈을 버는 일명 '유튜브 스트리머(Streamer)'는 어떻게 탄생될까.

핵심 구조는 영상에 달린 광고
'애드센스(AdSense) 시스템'

유튜브 수익창출의 핵심은 '애드센스'라는 시스템이다. 동영상에 달려나오는 광고를 시청하거나 도중에 클릭을 하면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된다. 애드센스 이외에도 조회수로 값을 매겨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튜버들은 자신의 동영상을 모은 채널 구독자수를 늘리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 채널을 구독하면 피드에 자신의 동영상 목록이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클릭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구독자수가 늘어나면 업체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뷰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거나, 이에 따른 광고수익도 낼 수 있다.



먹방, 뷰티, 게임중계 방송부터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의
일상, 하루 일과 등도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먹방·뷰티·일상까지 ...
세상 모든 것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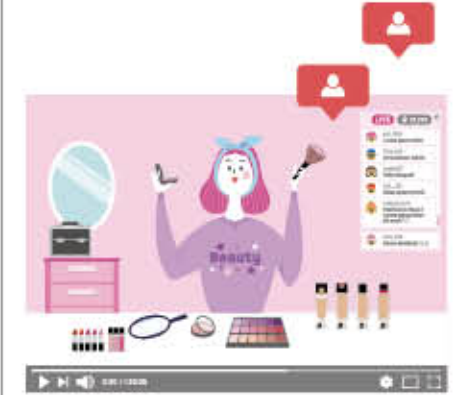
동영상의 주제, 콘텐츠의 소재는 매우 방대하다. 요즘 유행하는 먹방(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뷰티(화장품 소개나 화장법을 알려주는 영상), 게임중계 방송부터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의 일상, 하루 일과 등도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채널을 운영할 때 유행에 휩쓸려 마구잡이 식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하나의 콘셉트를 잡아 가는 게 좋다. 채널의 주제가 잡히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 나만의 채널에 들어오는지, 혹은 구독자의 연령대, 성별 등을 채널 통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방문자의 스타일에 맞춘 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소재나
저작권 침해 주의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유튜브의 시스템은 유튜버들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콘텐츠가 재미없으면 가차 없이 스크롤을 내리거나 뒤로 가기를 누르는 시청자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좀 더 독특하고 흥미로운 소재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구독자 끌기와 조회수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여과없이 내보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조회수=돈'이란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막 덧입히기, 재생속도 변경, 여러 영상 짜깁기 등 편법을 도용한 '콘텐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 영상 신고를 접수하고 동영상 도용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영상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공비결은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 찾는 즐거움'

한편 인기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그 비결로 '꾸준함'을 꼽았다. 처음에 올린 영상은 한 달이 지나도 조회수가 100을 넘기도 힘들지만, 자신만의 콘텐츠로 꾸준히 올리면 어느새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즐겨야 한다는 점이다. 유튜버들은 수익을 제1의 목표로 삼기보다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이 즐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고 여겼던 과거는 지났다. 이제 꿈 꾸던 일을 즐겁게 실행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그 시대에는 학력·성별·나이 차별이 없다.



성공비결은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즐겨야 한다는 점이다.
유튜버들은 수익을 제1의
목표로 삼기보다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독자마당

2018년 봄호에 대한
독자 의견입니다

01

한 사람의 영향력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준 전경원 교사의 과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불의한 요소들을 용기 있는 참된 행위를 통해 정화시킨 멋진 모습의 국어 선생님 이런 정직한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빈(대전광역시 동구)



02

양육수당 소급 지원에 주세영의 해결방법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도움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기사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철(서울시 영등포구)



03

청령한 여행에서 소개한 명재고택을 보고 마음이 설렸습니다.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어 잘 알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사진과 기사를 보니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리 역사가 깃든 곳이라 더욱 마음이 끌립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하는 저로서는 여행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잠시 여유가 생겨 기쁘네요.

양서희(전북 장수군)



04

청령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코너를 잘 보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청령도는 과연 어느정도일까.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시는 송재관님의 청령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단 10원도 용납 못한다는 그의 소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정미행(경남 마산시)



05

슬로건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국민권익'을 표현할 슬로건을 구성하다보면 자연스레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 구호처럼 익숙해지면 슬로건의 홍보효과도 좋을 듯 합니다.

이현정(인천광역시 남동구)



권익위 열독왕

QUIZ?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난호 정답 청백리포터

정답자 : 김건영(경남 김해시)

정혜승(경기도 고양시)

김혜선(광주광역시 북구)

황선미(경기도 남양주시)

정창재(경기도 용인시)

퀴즈 당첨자 다섯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상품문의는 소식지 제작사 **더에이치**(031-247-5141)로 문의해 주세요. (2018년 당첨자만 해당)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에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생각이 모이면 정책이 바뀝니다

「국민생각함」은 다수인의 참여와 토론으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국민생각함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